

# KWDI

## 해외통신

2021년 6월 (2021.6.1 ~ 6.30)



### 프랑스 FRANCE

#### 프랑스, 15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법 제정

박서희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박사과정

- 2021년 3월, 프랑스 하원에서는 만장일치(찬성 94표, 반대 0표)로 만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합의 여부 상관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먼저 발의된 것으로, 의회에서 오랜 기간 수많은 수정 및 논의를 거쳐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됐다.
- 프랑스에서는 과거 성추행 사건이 폭로된 사회 유명 인사들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도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죄 또는 낮은 형량을 받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법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었다.
- 특히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8년 한 28세 남성이 공원에서 만난 11세 소녀를 본인 아파트로 데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여 강간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낮은 형량을 받게 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이는 본격적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법 마련에 관한 논의가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재판 당시 피고인 남성 측 변호인단은 소녀가 자발적으로 남성을 따라갔고 상황을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소녀 측 변호인단은 11세로 성관계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인지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였다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원은 결국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법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에마누엘 마크롱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 강화를 추진했고, 내각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초안 마련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합의에 기반 한 성관계 가능 최소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가 오가기도 했으나 정부 측에서는 15세를 추진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5세로 법안에 반영됐다.

#### 참고자료

- Amnesty International(2020.12.17), "Let's talk about 'yes': Consent laws in Europe", <https://www.amnesty.org/en/latest/campaigns/2020/12/consent-based-rape-laws-in-europe/> (접속일: 2021.06.26.)
- France 24(2021.04.15), "French parliament approves landmark bill setting age of sexual consent at 15", <https://www.france24.com/en/france/20210415-french-parliament-approves-landmark-bill-setting-age-of-sexual-consent-at-15> (접속일: 2021.06.26.)
- Le Monde (2021.04.15.), "Violences sexuelles : le Parlement adopte une loi fixant le seuil de non-consentement à 15 ans",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21/04/15/violences-sexuelles-le-parlement-adopte-une-loi-fixant-le-seuil-de-non-consentement-a-15-ans\\_6076933\\_3224.html](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21/04/15/violences-sexuelles-le-parlement-adopte-une-loi-fixant-le-seuil-de-non-consentement-a-15-ans_6076933_3224.html) (접속일: 2021.06.26.)

해당 법이 한창 의회에서 막바지 논의 중이던 올해 초에도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관련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 2월, 프랑스 파리 소방관 20여명이 2008년 당시 13세였던 소녀를 2년 넘게 무려 130차례가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던 사실이 드러나 프랑스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지고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그중 단 3명만이 기소되었고, 그들 역시 강간이 아닌 성추행으로 형량이 줄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항소했고, 결국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프랑스 대법원은 강간으로 확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이를 계기로 강간 규정 및 처벌에 관한 여론이 크게 증가했다. 해당 판결은 의회에서 15세 이하 성관계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 불과 며칠 뒤 내려진 판결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도심 곳곳에서 수차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같은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은 그동안 위협의 유무가 아니라 상호 합의를 기반으로 강간 행위를 판단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옹호 활동을 추진해왔다. 합의 없이 일어난 성관계를 강간으로 정의하는 유럽 국가로는 벨기에,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이 있다. 이번 4월에 제정한 법으로 인해 프랑스 기존 법적 기반이 강간을 규정하는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위협 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이라고 정의하고 처벌을 명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전 형법에서도 기준 연령은 같은 15세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검찰 측에서는 강간 기소 시 서로 합의하지 않았던 상황이고 피고가 협박이나 폭력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했다. 입증에 실패하면 가해자는 기존 형법 제227-25항에 따라 강간이 아닌 15세 이하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최대 5년형과 75,000유로(한화 약 1억 113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후 법무부 장관(Justice Minister) 에릭 듀퐁-모레티(Eric Dupond-Moretti)는 의회 연설에서 "우리 아이들과 사회에 역사적인 법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손댈 수 없으며, 이제 성인 그 누구도 15세 이하 아동에게 서로 합의해서 행한 성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에 따르면 15세 미만 강간에 관한 유죄 확정시 형량은 최대 20년에 이른다. 논의 당시 의회 일각에서는 15세 연령 규정을 못 박으면 서로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또래 간 합의된 성관계가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따라서 해당 법에는 일명 '로미오와 줄리엣' 조항을 포함했는데, 5살 차이 내 개인 간 성관계는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법은 프랑스 정부와 의회가 다각도에서 성범죄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위 내용뿐만 아니라 이번 법에서는 근친관계이면서 18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도 강간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온라인 아동 성도착자 또는 성추행 규제도 강화됐다. 온라인상에서 15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해 정신적으로 길들이고 성행위를 취하게끔 하는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과 15만 유로(한화 약 2억 228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한 동의 없이 타인의 치마나 옷 사이에 카메라를 대고 몰래 촬영하는 자는 징역 1년 형과 최대 15,000유로(한화 약 2,023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 Politico Europe(2021.03.16), "France moves toward setting 15 as age of consent. What took it so long?", <https://www.politico.eu/article/france-moves-toward-setting-15-as-age-of-consent-what-took-it-so-long/> (접속일: 2021.06.26.)
- Reuters (2019.08.06), "France fines more than 700 in first year of 'cat-call' law", <https://www.reuters.com/article/us-france-law-harassment-idUSKCN1UW1NY> (접속일: 2021.06.26.)
- The Government of France (프랑스 정부 공식 웹사이트), "Against sexual and sexist violence," <https://www.gouvernement.fr/en/against-sexual-and-sexist-violence> (접속일: 2021.06.26.)
- The Guardian(2018.02.14.) "French girl, 11, 'not a child' say lawyers for man, 29, accused of sexual abus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feb/14/french-girl-11-not-a-child-say-lawyers-for-man-29-accused-of-sexual-abuse> (접속일: 2021.06.26.)
- The Guardian(2021.03.18), "Firefighters should not face charge of raping girl, French court rule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mar/18/firefighters-should-not-face-charge-rape-girl-french-court-rules> (접속일: 2021.06.26.)

프랑스는 이미 2018년에도 한차례 성범죄 관련법을 강화한 바 있다. 우선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소멸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예를 들어 당시 18세 미성년자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48세가 될 때까지 해당 피해를 신고하고 기소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길거리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캐츄링(catcalling)과 같은 성추행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최대 750유로(한화 약 102만원)의 벌금, 특히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최대 1,500유로(한화 약 203만원)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법 제정 이후 실제로 관계당국이 공공장소 성추행으로 700건이 넘는 벌금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8월 발표 기준).

프랑스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성년자, 그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해당 법이 의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발효 이후 실제 다양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독일 GERMANY



### 성평등한 디지털 세계 구축을 위한 독일 정부 이니셔티브

채혜원 독일통신원

독일 연방정부가 세 번째 성평등 보고서 주제를 '디지털 성평등'으로 채택했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 안에서 남녀가 동등한 실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과제를 설정해야 하는지, 앞으로 성평등한 디지털화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평등 보고서는 독일의 성평등 조치 권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발간되고 있으며, 2011년, 2017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발표했다. 성평등 보고서는 경제학, 공학, 법학, 교육학, 사회학 등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현재 독일 디지털 산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6%에 그치고 있다. 여러 앱, 마이크로 칩 및 기타 혁신 기술은 거의 남성에 의해 독점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여성의 관점은 배제되고 있다. 이에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는 MINT(수학, 정보통신, 자연과학 공학) 분야 여성 지원에 주력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있는 여성이 관련 직업군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예를 들어 이니셔티브 'Komm mach MINT(민트하자!)'는 여성이 학교나 회사 등에서 MINT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 교육 연구부는 '민트와 함께하자'에 매년 약 3백만 유로(한화 약 39억 6,291만 원)를 제공하고 있다.

#### 참고자료

- bmfsfj(2021.06.09.), "Ministerin Lambrecht: Digitalisierung für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nutzen",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ministerin-lambrecht-digitalisierung-fuer-die-gleichstellung-von-frauen-und-maennern-nutzen—182034> (접속일: 2021.06.27.)
- bmfsfj(2021), "Digitalisierung geschlechtergerecht gestalten", <https://www.bmfsfj.de/bmfsfj/ministerium/berichte-der-bundesregierung/dritter-gleichstellungsbericht?view=> (접속일: 2021.06.27.)

스타트업 분야에서의 여성 비율도 마찬가지로 낮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스타트업의 70%가 남성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여성인력이 저평가되어있는 것은 사회보장 부족과 같은 구조적 장벽 그리고 남성이 주도하는 디지털 기업가 이미지와 같은 성별고정관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며 “더 많은 여성이 창업하려면 지금보다 나은 자본금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늘어난 홈오피스나 유연근무가 자녀를 키우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이중부담이 되고 있어, 남성이 가족 돌봄 업무를 동일하게 분담할 경우에만 여성이 직장생활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게 되는 상황에 대해 짚었다. 위원회는 독일에서 집안일이나 가족 병간호 등 무급 돌봄 업무를 남성보다 여성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홈오피스 등 디지털 작업 문화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급 돌봄 작업에 대한 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평등한 디지털 세계 형성’이란 주제로 발표된 이번 성평등 보고서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 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러 권장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전문가위원회가 꼽은 디지털 작업 세계에서 차별을 방지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권장사항 중 일부이다.

#### 이니셔티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Initiative Klischeefrei) <https://www.klischee-frei.de>

전문가위원회는 소녀와 여성이 IT 회사에 합류하거나 과학 및 기술, 컴퓨터를 공부하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찍 길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이와 관련해 여성이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직업 선택을 하도록 장려하는 ‘이니셔티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Initiative Klischeefrei)’가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학생들이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공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청소년이 성별 고정관념이 없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대학, 기업 및 교육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일자리 선택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다양한 주제로 이뤄진 일자리 및 전공 선택에 관한 정보지 발행’ ‘젠더 차이를 뛰어넘은 일자리 전반에 대한 상담’ 등이 이뤄진다. 이 이니셔티브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교육·연구부가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bmfsfj(2021), “Was sind Gleichstellungsberichte?”, <https://www.dritter-gleichstellungsbericht.de/de/topic/69.die-gleichstellungsberichte.html> (검색: 2021.06.28.)

- bmfsfj(2021), “Die Initiative FRAUEN unternehmen”, [https://www.existenzgruenderinnen.de/DE/Vernetzung/Frauen-unternehmen/Initiative/Initiative\\_node.html;jsessionid=5E8396A825B33B9DCE9976A82BBF8C3F](https://www.existenzgruenderinnen.de/DE/Vernetzung/Frauen-unternehmen/Initiative/Initiative_node.html;jsessionid=5E8396A825B33B9DCE9976A82BBF8C3F) (접속일: 2021.06.28.)

- bmfsfj(2021), “DIGITALE GEWALT: ANGRIFFE AUS DEM NETZ”, <https://staerker-als-gewalt.de/gewalt-erkennen/digitale-gewalt-erkennen> (접속일: 2021.06.28.)

독일 디지털 산업 내 여성 비율 16%, 모든 스타트업의 70%가 남성팀으로 구성된 등의 문제를 두고 전문가위원회는 오래된 성별 고정관념과 일·가정 양립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여성 창업가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되고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여성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2014년부터 여성이 기업가나 창업자가 될 수 있도록 ‘이니셔티브 여성 기업(Frauen unternehmen)’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에서는 현재 약 200명의 여성 기업가들이 주축이 돼, 되도록 많은 여성이 자신의 기업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여학생, 직업훈련생, 대학생을 비롯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과 만나는 자리를 열어 여성 사업가가 되는데 필요한 요소에 대해 알려준다. 또한 여성들은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여러 여성 사업가들과 네트워크를 맺을 기회를 얻고 있다.

### 디지털 성폭력 문제 대응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디지털 폭력과 증오범죄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다. 독일에서 디지털 폭력 및 성폭력은 명예훼손, 모욕, 위협, 동의되지 않은 사진·영상 촬영, 신분 도용, 음란물 전송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지며, 이는 현재 독일 여러 형법 조항에 따라 범죄 행위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음란물 사진 전송은 형법 184조, 디지털 채널 통제는 형법 240조 및 241조, 사이버 스토킹은 238조, 인터넷상에서의 모욕과 위협은 185조, 동의하지 않은 사진 촬영은 사생활 침해와 연관된 형법 20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전문가위원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 상담 인프라 확충과 전문상담소 및 폭력 보호시설 직원의 디지털 능력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 법 집행기관, 사법부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폭력 및 성폭력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젠더매거진 <MEIN TEST GELAENDE> <https://www.meintestgelaende.de/>

전문가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더 다양한 표현이 이뤄지고 평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간이 필요한 점은 짚으면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젠더매거진 ‘MEIN TEST GELAENDE (meintestgelaende.de)’을 소개했다. 이 매거진은 모든 청년에게 비디오, 시, 노래, 랩 또는 만화 등을 통해 젠더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은 매거진을 통해 여러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600여 명의 필자가 참여해왔으며 주로 젠더, 평등, 정의, 다양성을 주제로 다룬다. 이 외에도 매거진에서는 다양한 교육 워크숍과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문화주간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 매거진은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지원하고 있다.



## 영국의 성폭력 피의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정책 - 경찰과 검찰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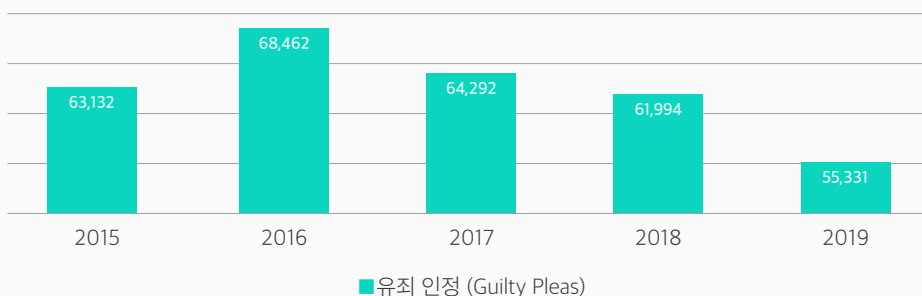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영국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 (rape victim)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영국 내무성(Home Office)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 중 1.6%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성폭력 피의자가 처벌받는 비율이 미미하다. 이와 함께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성폭력 피해자 절반가량이 수사가 시작된 뒤 형사 소송을 철회할 만큼 수사 과정에서 지쳐 가해자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통계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기소되는 비율을 높여 더 많은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본론에서는 영국의 연도별 성폭력 사건 기소 건수와 성폭행 사건 경찰 신고 현황 등 통계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형사 소송을 철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이후 영국 정부가 내놓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 영국 성폭력 사건 검찰 기소, 4년 만에 약 20% 감소

- 영국은 2016년을 기점으로 검찰이 기소하는 성폭력 사건 건수가 꾸준히 감소했다. 영국 검찰 (Crown Prosecution Service)가 2019년 발간한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 보고서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Report, 2018-2019)'에 따르면, 2016년 68,462건이었던 유죄 인정 (Guilty pleas) 건수가 꾸준히 감소해 2019년에는 55,331건으로 4년 만에 19% 떨어졌다.
- 검찰의 사건 기소 건수가 중요한 이유는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경찰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때만 사건을 기소해 법원으로 넘긴다. 검찰 사건 기소 건수가 낮으면 그만큼 법의 심판을 받고 처벌받는 피의자 숫자도 줄어든다. 영국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가 6월 18일 '성폭력 대응 점검 (Response to rape overhauled)'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찰의 성폭력 사건 수사와 검찰 기소 건수를 2016년 수준으로 높이겠다"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도 2016년 이후 법원 앞에 선 성폭력 피의자 숫자가 줄고 있는 것과

지난 5년간 검찰에 기소된 성폭력 사건 유죄 인정 건수



자료 출처: Crown Prosecution Service(2019.09.12.),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Report, 2018-2019.>

### 참고자료

- GOV.UK(2021.06.18.), "Response to rape overhauled", <https://www.gov.uk/government/news/response-to-rape-overhauled> (접속일: 2021.06.23.)
- The Guardian(2021.06.17.), "Ministers apologise to rape victims and promise overhaul of system",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1/jun/17/ministers-apologise-to-rape-victims-and-promise-reform-in-review> (접속일: 2021.06.23.)
- BBC(2021.6.20.), "Why are rape prosecutions failing?", <https://www.bbc.com/news/uk-48095118> (접속일: 2021.06.23.)
- Crown Prosecution Service (2019.09.12.),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Report, 2018-2019", <https://www.cps.gov.uk/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cps-vawg-report-2019.pdf> (접속일: 2021.06.23.)
- HM Government(2021.06.18.), "The end-to-end rape review report on findings and action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94816/end-to-end-rape-review-report.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94816/end-to-end-rape-review-report.pdf) (접속일: 2021.06.23.)
- The Victims' Commissioner for England and Wales(2019.08.15.) "VC analysis of victims' reasons for withdrawing sexual offence complaints", <https://s3-eu-west-2.amazonaws.com/victcomm2-prod-storage-119w3o4kq2z48/uploads/2019/08/OVC-analysis-victims-complaints-withdrawal.pdf> (접속일: 2021.06.23.)



## 소송 과정이 고통스러워 포기하는 피해자들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뒤 수사 과정에서 형사 소송을 철회하는 것도 검찰의 성폭력 사건 기소 건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영국 정부가 올해 6월 발간한 보고서 ‘The end-to-end rape review report on findings and actions’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전체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사건 진행을 철회해 수사가 중단된 비율이 2016년엔 42%였지만, 2019년에는 57%로 15% 늘었다. 성폭력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꼴로 피의자가 법원의 심판을 받기 전에 소송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2019년 3월부터 2년 넘게 공을 들인 이 보고서는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 검찰의 기소 건수 등 다양한 통계와 피해자 인터뷰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성폭력 사건 건수가 2016년 이후 줄어든 이유를 분석했다.

형사 사건 피해자와 증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독립 기관인 영국피해자기구 (The Victims' Commissioner for England and Wales)는 2019년 8월, 피해자가 사건 수사 과정과 형사 소송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소송을 철회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놔다. 영국 피해자기구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성폭력 피해자 신고 센터인 ‘Rape Crisis’를 통해 경찰에 신고된 사건 중 수사 과정에서 소송을 철회한 사건 521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소송을 철회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 중 26%는 “형사법 체계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too distressing)”, 21%는 “학교나 고용 정보, 부정적인 언론 보도, 병원 기록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소송을 철회했다고 답했다. 영국 피해자기구는 “이 설문 조사 결과는 피해자들이 형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쳐 포기하는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영국 정부의 대책은? 사건 기록표와 소테리아 작전

영국 정부도 사법 체계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관(Lord Chancellor)이자 법무부 장관인 로버트 버클랜드는 6월 18일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법 체계의) 구조적 실패 때문에 정당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피해자 지원 강화, 철저한 사건 수사, 강력한 기소 등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사과했다.

정부가 내놓은 주요 대책은 6개월 주기로 발간하는 사건 기록표(scorecards)다. 사건 기록표는 성폭력 수사 시의성, 피해자의 수사 참여 정도, 사건의 신빙성 등 구체적인 척도를 바탕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및 법원 판결 결과 등을 점검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키트 말하우스 범죄치안부 차관 (Minister for Crime and Policing)이 성폭력 관련 업무를 별도로 담당해 관리 감독하고, 피해자 기구, 가정폭력기구, 피해자 그룹, 형사 사법 기관과 매달 회의를 연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영국 정부의 보고서 ‘The end-to-end rape review report on findings and actions’는 경찰과 검찰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할 때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휴대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 기록 전체를 ‘디지털 수색 (digital strip search)’해서 안 되며, 사건과 관련이 증거만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 경찰은 어떤 경우여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24시간 안에 돌려줘야 하고, 그 동안 피해자에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제공해야 함.
- Independent Sexual Violence Advisors (ISVA)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ISVA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경찰 조사, 피해자 심리 상담, 피해자가 원하면 사회 복지 정책, 주거 지원까지 연결하는 폭넓은 임무를 수행하는 폭력 피해자 전문 상담가다)
- 첫 수사부터 법원 판결까지 피해자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정보 제공

또한, 영국 정부는 내년부터 파일럿 정책인 ‘소테리아 작전 (Operation Soteria)’을 실행한다. 소테리아 작전이란 경찰과 검찰이 초동 수사를 할 때 수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성폭행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피의자의 반복된 범죄 행위나 수상한 행동에 집중하는 수사 모델이다. 영국 정부는 ‘The end-to-end rape review report on findings and actions’ 보고서에서 “6개월간 소테리아 작전을 실행해 성공할 경우 경찰과 검찰 전체의 새로운 수사 모델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지난 4년간 검찰이 기소하는 성폭력 사건 숫자가 20% 가까이 감소해 성폭력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꼴로 피의자가 법원의 심판을 받기 전에 소송을 포기하고 있어 피해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영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사법 체계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처벌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새롭게 내놓은 사건 기록표, 소테리아 작전 같은 정책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캐나다 CANADA



### 캐나다 성폭행 통계 현황과 대응

김 양 속 토론토 대학 객원연구원(Visiting Research Fellow)

캐나다에서는 2000년대 이후로 성범죄가 실재보다 통계에 과소하게 집계되는 문제가 꾸준히 공론화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 성폭행(sexual assault) 범죄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경찰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뿐더러 설사 경찰이 인지하더라도 통계적으로 과소 대표되는 경향이 있다.

#### 참고자료

- CBC(2019.07.23.), “1 in 7 sexual assault cases in 2017 deemed ‘unfounded’: StatsCan”,  
<https://www.cbc.ca/news/politics/sexual-assault-unfounded-stats-1.4757705>  
(접속일: 2021.06.19)




예컨대 2014년 캐나다 일반 사회 조사(GSS: General Social Survey) 통계에 의하면 성폭행이 아닌 여타의 폭행 사건은 실제 발생한 사건의 38%가 경찰에 신고된 반면, 15세 이상이 피해자였던 성폭행의 경우 경찰이 인지한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의 5%에 그쳤으며, 이러한 성폭력의 과소 인지 경향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The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2018).

그러나 캐나다의 주요 범죄 통계로서 캐나다 범죄통계센터(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CCJS)가 집계, 배포하는 중앙 범죄 조사(Uniform Crime Reporting Survey: UCR Survey, 이하 UCR 범죄 조사)에서는 GSS 통계와는 달리 캐나다의 성폭행 건수가 2004년부터 10년간 감소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The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2018). 이렇게 UCR 범죄 조사 통계가 일반 사회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마치 캐나다 사회에서 성폭행이 줄어든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이유는 이 통계가 경찰이 인지한 사건만을 통계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상당수의 성범죄가 이 UCR 조사 통계 자료에는 누락된다.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범죄 통계에 반영된 성폭행은 실제 사건의 약 10%만이 집계된다고 보면서, 성폭행(sexual assault) 통계는 UCR 조사 통계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피해자들의 자신의 성폭행 경험에 대해 직접(self-reporting) 대답한 문항이 포함된 일반사회조사(GSS) 통계를 취합할 때 좀 더 실체에 근접한 통계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The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2018).

성폭행 범죄가 통계적 과소 대표 되는 이유로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는 점, 가해자의 다수가 친구, 친척, 이웃, 배우자 등 면식범이라는 점 등의 젠더 규범적 측면이 역할이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 사회에서 이슈가 된 부분은 경찰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런 과소 대표 경향을 악화 시켰냐는 것이었다. 요컨대 피해자들이 어렵게 성폭력 범죄를 신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한 경찰이 수사를 임의로 종결 시키고 범죄 통계에도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집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그간 캐나다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인지는 하였으되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담당 수사관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사건들을 근거없는(unfounded) 사건으로 분류하고 수사를 종결해 왔다. Unfounded로 분류된 사건은 범죄사실이 확증 되지 않은 일종의 암수 사건인데, 문제는 경찰이 인지한 사건을 unfounded로 분류하는 경우가 성범죄의 경우에 특히 빈번하다는 것이다. 캐나다 범죄 통계 센터는 1962년부터 unfounded 사건에 대한 통계를 수집해왔으나 경찰이 특정 사건을 unfounded로 분류하는 기준이 일관적이지도 않고 모든 경찰서에서 unfounded 사건을 보고하고 있지도 않으며, 사건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더라도 일괄적으로 CCJS(캐나다 범죄통계센터)에 보고되고 있지 않아 통계수치를 신뢰 할 수 없다고 판단, CCJS는 2006년 이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7년 캐나다 언론사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이 성폭력에 대한 경찰 데이터를 입수, 분석하여 기획 보도를 내 이 이슈를 공론화 시켰다. 글로브 앤 메일 보도에 의하면 캐나다 전국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5분의 1이 unfounded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이들의 호소가 경찰에 의해 쉽게 무시 되고, 이렇게 묻힌 사건들은 통계에 잡히지조차 않는다는 것이다(The Globe and Mail, 2017). 또한 이 보도에 따르면 신고된 성폭력 사건 중 unfounded로 처리되는 사건의 비율은 지역별 차이가 큰데, 예컨대

- CBC(2021.11.), "Review team for 'unfounded' sexual assault cases hasn't met in a year", <https://www.cbc.ca/news/canada/hamilton/sexual-assault-community-review-team-sacha-hamilton-police-1.5849342> (접속일: 2021.06.19)
- The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2018,07.12.), "Revising the classification of founded and unfounded criminal incidents in the Uniform Crime Reporting Survey", <https://www150.statcan.gc.ca/n1/pub/85-002-x/2018001/article/54973-eng.htm> (접속일: 2021.06.19)
- 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2021), "Bring Justice to unfounded cases of sexual assault", <https://women-gender-equality.canada.ca/en/funding/stories-impact/coalition-ottawa.html> (접속일: 2021.06.19)
- The Globe and Mail(2017.02.03.), "Unfounded: Police dismisses 1 in 5 sexual assault claims as baseless" <https://www.theglobeandmail.com/news/investigations/unfounded-sexual-assault-canada-main/article33891309/> (접속일: 2021.06.19)
- Department of Justice, "An Estimation of Economic Impact of Violent Victimization in Canada, 2009". [https://www.justice.gc.ca/eng/rp-pr/cj-jp/victim/r14\\_01/p10.html](https://www.justice.gc.ca/eng/rp-pr/cj-jp/victim/r14_01/p10.html) (접속일: 2021.06.19)
- Michael Arntfield(2018), "How Police Underestimate Break-ins as Gateway Crimes for Sex Predators, The 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how-police-underestimate-break-ins-as-gateway-crimes-for-sex-predators-95102> (접속일: 2021.06.19)
- Beauregard, Eric, Matt DeLisi, and Ashley Hewitt(2018.12). "Sexual Murderers: Sex Offender, Murderer, or Both?", Sexual Abuse 30, no. 8: 932-50. <https://doi.org/10.1177/1079063217711446> (접속일: 2021.06.19)

뉴브런즈윅의 경우 그 비율이 51%에 달했으며, 온타리오주에서도 30% 이상을 기록한 지역들이 많았다. 이 기획 보도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통계 집계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범죄의 실체가 매우 체계적으로 왜곡되고 있었을 보여주었기에 캐나다에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또한 이 보도는 경찰이 어떤 사건을 unfounded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일관된 기준 없이 개별 수사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고 수사관이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어떠한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 짐을 밝혀 큰 충격을 주었다. 취재진은 일선 수사관들의 분류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성폭력 범죄를 구성하는 데 동의(consen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CBC, 2019). 캐나다 형법은 성폭력 범죄를 구성함에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향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컨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적극적인 의사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채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이를 상호 합의 하의 성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성폭력 피해자가 취해 있었다거나 하면 사건을 자세하게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unfounded로 분류, 수사를 종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성폭력 담당 일선 경찰관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 또한 요인이다. CBC 보도로는 수사관 한 명이 1년에 다뤄야 하는 사건이 80개에 다다랐으며, 과중한 업무의 압박은 수사관들이 손쉽게 사건을 종료하는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CBC, 2021).

 글로브 앤드 메일 보도 이후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과연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이슈가 공론화되자 캐나다 경찰은 unfounded로 분류되어 수사가 종료된 성폭력 사건들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브 앤드 메일 보도 당시 unfounded 사건의 비율이 70%에 달했던 온타리오 해밀턴(Hamilton)시의 경우 unfounded 사건들을 재검토, 여섯 건의 수사를 재개하였으며 그중 한 건의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사안의 사회적 공론화 이후 경찰은 성범죄 담당 수사관을 매년 증원이 매년 증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7년 이후 캐나다 경찰이 특정 사건을 unfounded 사건으로 분류하는데 있어서 피해자 중심으로 그 접근법을 바꿨다는 것이다. 2017년 이전에는 개별 수사관이 단순히 피해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손쉽게 사건을 unfounded 사건으로 처리해 버렸는데, 2017년 이후 캐나다 경찰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지 않은 이상은 피해자가 신고한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치부하도록 수사 및 사건 분류 방침을 피해자 중심으로 바꿨다. 또한 CCJS 에서 전국의 수사기관을 상대로 워크숍을 실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온라인 훈련 툴을 수사 현장에 도입하였다(The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2018). 캐나다 여성부(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 또한 그간 손쉽게 unfounded 사건으로 분류, 종결되어왔던 성폭력 사건들을 수사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툴인 Violence Against Women Advocate Case Review(VACR) model 을 도입하였다. 오타와 여성 폭력 근절 단체 연합(Ottawa Coalition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OCTEVAW)과 함께 개발한 이 모델은 경찰 외부에서 젠더 관점을 가진 제 3자 전문가들이 경찰 사건 파일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놓친 것이 없는지 검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지이다. 여성부의 주도하에 젠더폭력 전문가들이 19개의 리뷰 사이트를 생성, 지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지역 경찰들과 함께 성폭력 사건들을 함께 검토할 수 있게 하여 수사와 피해자 구제 절차에 있어서 전문가들과 경찰간의 협업 촉진하였다(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 2021). 캐나다 여성부는 이 프로젝트를 2019년까지 진행하였다.

🔗 캐나다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2017년 이후 하비 와인슈타인 (Harvey Weinstein) 사건 등으로 본격적으로 촉발된 미투 시국에 접어들면서 캐나다에서도 성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했으나 이들 사건이 unfounded로 분류되는 비율은 줄어든 것이다(CBC 2019). 2017년에는 경찰에 신고된 전체 성폭력 사건의 14%가 unfounded로 처리되었고 이는 2016년에 비해 19% 감소했다. 특히나 심각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unfounded로 처리되는 경우가 매우 줄어들었다. 해밀턴시의 경우 2014년에는 410건의 성폭행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16%만이 유죄판결을 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된 반면, 2019년에는 433건의 성폭행 사건 수사 중 154건의 가해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CBC 2021). 그러나 범죄 전문가들은 여전히 성범죄가 시스템적으로 심각하게 과소 집계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단순 침입(breaking-and-entering)이나 몰래 피해자를 집까지 따라와 관찰하는 등의 행위들은 여전히 범죄 통계에서 성범죄로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미수(attempt) 나 경범죄(mischief), 무단침입 등의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이 사건 발생 시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있었느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생각하는 것 보다 단순 침입 등의 경범죄가 성적 동기와 연관성이 강하고 이런 범죄들이 결국은 강간 및 연쇄살인 등의 강력범죄형 성범죄로 발달해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Beauregard et al. 2018), 경찰이 이들을 경범죄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잠재적 강력 성범죄자로 진화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 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들 가해자들의 DNA를 수집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rntfield 2018).